

가짜뉴스에 대한 인식과 팩트체크 효과 연구

기존 신념과의 일치 여부를 중심으로

Research on fake news perception and fact-checking effect - Role of prior-belief consistency

저자 (Authors)	염정윤, 정세훈 Yum, Jung-Yoon, Jeong, Se-Hoon
출처 (Source)	한국언론학보 62(2) , 2018.4, 41-80(40 page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62(2) , 2018.4, 41-80(40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언론학회 Korean Society For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423471
APA Style	염정윤, 정세훈 (2018). 가짜뉴스에 대한 인식과 팩트체크 효과 연구. 한국언론학보, 62(2), 41-80
이용정보 (Accessed)	서울대학교 147.46.43.*** 2019/08/08 16:07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가짜뉴스에 대한 인식과 팩트체크 효과 연구 기존 신념과의 일치 여부를 중심으로*

염정윤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연구교수**
정세훈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부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가짜뉴스에 대한 인식과 팩트체크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수용자의 심리적 기제를 파악하는 데 있다. 특히 수용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념이 유발할 수 있는 편향적 정보 처리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2(가짜뉴스와의 신념 일치 여부: 일치 vs. 불일치)×2(팩트체크 주장의 품질: 강 vs. 약)×2(팩트체크 정보원: 우호 vs. 비우호) 요인 설계를 적용한 실험 연구를 진행하였다(N = 446). 연구 결과 사람들은 자신의 기존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뉴스를 가짜뉴스라고 인식하는 정도가 증가하였고 뉴스 전파의도는 감소하였다. 팩트체크 효과의 경우 주장의 품질과 정보원의 상호작용이 신념과의 일치 여부에 따라 조절되었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가짜뉴스의 경우 정보원 우호도와 관계없이 강한 주장의 팩트체크에 대해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지만,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가짜뉴스의 경우 우호적 정보원의 강한 주장에 대해서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팩트체크에 대한 평가는 가짜뉴스 인식과 뉴스 전파의도를 매개하였다.

핵심어: 가짜뉴스, 팩트체크, 편향적 정보처리, 주장의 품질, 정보원

* 본 연구는 제1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에 기반 하였으며, 제1저자에게 고려대학교에서 지원된 연구비로 수행되었음. 본 연구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서 <가짜 뉴스 현황과 문제점>의 데이터 일부를 사용하였음.

** jungyoon.yum@gmail.com

*** sjeong@korea.ac.kr, 교신저자

1. 서론

목적지 아닌 거짓 정보가 시중에 유통되는 것은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하지만 가짜뉴스가 이처럼 주목을 받는 것은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과 소셜 미디어의 등장은 일반 대중들도 정보 생산 능력을 갖추게 하였다. 간단한 문서 작성 능력과 인터넷 사용 기술을 갖추면 누구나 쉽게 정보 생산과 유통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소셜 미디어나 포털 사이트는 전통 미디어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실제 미국 성인의 62%가 뉴스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Mitchell & Holcomb, 2016). 국내의 경우 소셜 미디어 뉴스 이용률은 15% 수준으로 그리 높은 편은 아니었지만 대신 컴퓨터와 모바일 인터넷을 통한 뉴스 이용은 73.8%에 달했다(김위근·남유원, 2016). 이는 텔레비전(83.2%) 뉴스 이용률에 버금가고 종이 신문(20.9%) 뉴스 이용률은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온라인이나 소셜 미디어를 통한 뉴스 이용이 전통 매체를 통한 이용만큼이나 빈번하게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게이트키퍼링이나 사실 검증, 데스크 등 잘못된 정보에 대한 여과 장치가 존재하는 전통 언론과는 달리 온라인이나 소셜 미디어의 경우 일반인에 의해 생산되거나 진위나 품질에 대한 확인이 없는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유입되어 유통될 수 있다(Allcott & Gentzkow, 2017).

새로운 미디어 환경의 또다른 특징은 사람들이 동질적인 정보만을 소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개인화 기술의 발달은 이용자의 인터넷 사용 기록을 분석하여 개인의 관심과 성향에 맞는 정보를 선별적으로 제공한다. 예를 들어 네이버나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은 이용자가 관심 있을 만한 정보를 검색 결과의 상위에 제시하고 페이스북은 뉴스피드에 이용자의 관심사에 기반한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그리고 자주 제시하는 식이다.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맞춤형 정보를 손쉽게 얻도록 돕는다는 점에서는 효율적이지만 취향에 맞는 정보에만 노출되기 때문에 개인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한다는 부작용이 존재한다. 그 결과 인터넷을 통해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고 다양성을 기반으로 이상적인 공론장을 생성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자신의 성향에 맞는 미디어와 콘텐츠만을 소비하는 경향이 증가하였다(Levendusky, 2013; Wojcieszak & Mutz, 2009). 페이지저는 사람들이 거대한 필터링의 거품 속에 갇혀 있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현상을 필터 버블(filter bubble)이라고 명명하였다(Pariser, 2011). 필터 버블 속에서 사람들은 새롭거나 다른 것을 접할 여지가 적고 자신에게 친숙한 생각에만 노출되어 그 외의 것은 아예 '미지의 영역(dark territory or the unknown)'으로 남긴다(Pariser, 2011). 그리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

각에 더욱 확신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극단화에 이른다. 이는 그 자체로도 문제이지만 만약 이 버블 안에 가짜뉴스와 같이 사실과 다른 정보가 유입된다면 버블 전체가 오염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부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세계를 파악하고(Week & Garrett, 2014),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사람들과 다른 방향의 선호를 갖게 되므로(Kuklinski, Quirk, Jerit, Schwieder, & Rich 2000) 사회 통합의 관점에서도 부정적이다. 이 때 뉴스의 형태를 띠고 전달되는 가짜뉴스의 경우 사람들의 잘못된 신념을 더욱 강화하는 공신력 있는 정보원으로 평가 받을 수 있다.

이에 알고리즘을 조정하거나 가짜뉴스 매체에 광고를 제한하는 등 미디어 플랫폼 업체들의 자율 규제가 가짜뉴스의 대응 방안으로 대두되기도 한다. 하지만 기술을 이용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온라인 기술의 발전이 과거부터 존재해 왔던 거짓 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보다 쉽고 빠르게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핵심은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짓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활용하는가이다. 특히 가짜뉴스는 가짜임을 전제하지 않고 노출되기 때문에 여타의 정보와 동일하게 받아들여진다. 더욱이 외형상 뉴스의 형식을 갖추고 있어 가짜뉴스의 이용은 정보 이용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가짜뉴스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기술적 연구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최홍규, 2017; 한상기, 2017; 황용석·권오성, 2017). 따라서 본 연구는 가짜뉴스 이용의 심리적 기제에 주목하여 가짜뉴스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키는 요인에 대해 경험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기존에 지니고 있던 신념과의 일치 여부에 따라 동일한 가짜뉴스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확인할 것이다. 나아가 신념에 따른 편향된 정보처리가 가짜뉴스의 잘못된 정보를 정정하는 팩트체크 효과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역시 살펴 볼 것이다.

2. 이론적 논의

1) 가짜뉴스와 편향적 정보처리

가짜뉴스의 심각성과 사회적 논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가짜뉴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유사한 개념들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어 더욱 큰 혼란을 유발한다. 따라서 연구를 진행함에 앞서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가짜뉴스의 개념과 정의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가짜뉴스의 정의는 ‘가짜’라는 특성과 ‘뉴스’라는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가짜’가 가짜뉴스의 내용적 특징이라면 ‘뉴스’는 가짜뉴스의 형식적 특징에 해당한다.

내용적 차원에서 가짜뉴스는 사실(fact)과 다른, 일종의 오정보(misinformation)이다. 사실은 현실 세계를 그대로 재현하는 정보로 주관적인 의견이나 믿음과는 다르다. 따라서 오정보란 명백하게 거짓임을 입증할 수 있는 부정확한 정보로서 해당 주제의 전문가들이 옳지 않다(incorrect)고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정보이다(Tan, Lee, & Chae, 2015). 물론 관찰을 통한 증명이 가능한 자연과학과 달리 사회과학에서 명백한 참과 거짓을 가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Polkinghorne, 1983). 그럼에도 현 시점에서 가용한 증거들이 정보의 진술을 뒷받침해 준다면(Southwell & Thorson, 2015) 이를 사실이라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오정보가 가짜뉴스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기자의 단순 실수에 의한 오보는 분명 사실과 다른 정보에 해당하지만 그것을 가짜뉴스라 칭하지는 않는다. 가짜뉴스는 의도가 존재하는 오정보, 즉, 허위정보(disinformation)의 개념과 더욱 유사하다(황용석·권오성, 2017). 허위정보는 사실과 다른 정보라는 점에서는 오정보에 속하지만 해당 정보를 생산하고 퍼트림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자 하는 의도를 지닌 정보이다(Fetzer, 2004). 다시 말해 오정보가 사실이 아닌 정보의 총칭이라면 허위정보는 오정보 중 특정한 의도가 담긴 거짓 정보를 지칭하는 하위 범주라 할 수 있다.

형식적 차원에서 가짜뉴스는 외형상으로 뉴스의 구조와 양식을 갖추고 있다. 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손쉽게 신문 기사나 방송 보도의 틀을 복제할 수 있고 심지어 개인 웹사이트나 블로그 등을 통해 마치 언론사인 것처럼 보이는 가짜뉴스 매체를 제작해 운영하기도 한다(한상기, 2017). 가짜뉴스의 형식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정보가 전달되는 외적인 형태 차이만으로도 독자들의 신뢰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타인을 속이기 위한 목적으로 정교하게 고안된 가짜뉴스는 언론사의 제호와 기자의 바이라인(by-line), 기사의 구성 등을 갖추고 있어서 공신력 있는 정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실제로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에서 20-50대 남녀 1,08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동일한 내용의 가짜뉴스를 온라인 기사 형태로 제시하면 모바일 메신저 형태(예, 카카오톡)로 제시할 때에 비해 신뢰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세욱·박아란, 2017).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는 가짜뉴스의 정의는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생산된 뉴스 형태의 거짓 정보'라 할 수 있다.

가짜뉴스는 사실과 다른 정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유포함으로써 진실을 호도한다. 가짜뉴스의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해 다소 과장되어 받아들여지는 측면도 존재하지만 특정 집단의 사람들에게는 가짜뉴스가 유용한 정보로 인식될 수 있다(Allcott & Gentkow, 2017). 예를 들어 미국 대선 당시 클린턴 후보에 대해 부정적인 가짜뉴스가 다량 생산되거나 한국의 탄핵 정국에서 탄핵의 배후를 북한으로 지목하는 가짜뉴스 유인물이 배포되는 등 어떠한 집단이 목표하는 바를

위하여 생산되고 확산되었다. 즉, 집단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비록 명확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더라도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Flynn, Nyhan, & Reifler, 2017) 신뢰를 바탕으로 전파될 수 있다.

혹실드와 아인슈타인(Hochschild & Einstein, 2015)은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적극적 오인자(active misinformed)'라 분류하였다. 적극적 오인자는 틀린 지식을 바탕으로 공적인 영역에서 눈에 띄게 활동하는 사람들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옳다고 '느낀다'. 이들은 올바른 정보를 알고 있지만 이를 무시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잘못된 정보를 옳다고 믿는 사람들이며,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과 다소 다른 의견을 가지고 다르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집단 내에서 지속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공유하며 신념을 강화해 나가며 점점 극단화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가짜뉴스는 그 안에서 사람들의 신념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공신력 있는 정보원으로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 가짜뉴스의 진위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 뉴스가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가 보다 그 뉴스가 얼마나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가에 따라 내려질 수 있다. 즉, 편향된 정보처리가 관여하는 것이다.

쿤다(Kunda, 1990)는 이러한 편향적 정보처리를 동기화된 추론(motivated reasoning)이라 하였다. 이에 따르면 인지적 처리는 정확성 목표와 방향성 목표의 두 가지 동기에 의해 이끌어진다. 정확성 목표는 옳거나 최상의 결론에 도달하고자 하는 욕구로 정확성 동기가 높으면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고 주의 깊게 살핀다(Taber & Lodge, 2006). 또한 깊이 있고 복잡한 규칙들을 적용하여 정보를 해석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인지적 노력을 투입한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에도 노출되어 더욱 다양한 의견을 접하게 된다(Matthes & Valenzuela, 2012). 반면 방향성 목표는 자신이 원하는 결론을 미리 결정한 후 그것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이다. 자신의 생각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정보를 그에 적합한 단서로 활용하고 목표에 맞는 방향으로 해석하거나 기억한다(Fazio & Olson, 2003). 인간은 기본적으로 한정된 인지적 자원을 아끼고자 하는 '인지적 구두쇠'이기 때문에(Fiske & Taylor, 1991) 적은 인지 자원을 활용해 단시간 내에 원하는 결론에 도달하고자 하는 성향을 지닐 가능성이 높다.

방향성 목표에 이끌린 정보처리 과정에서는 편향된 정보처리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결과 기존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비판 없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데 비해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보다 면밀히 검토되고 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Ditto, Scepansks, Munro, Apanovitch, & Lockhart, 1998). 사전 태도 일치 여부에 따른 선택적 노출 현상을 확인한 67편의 논문에 대한 메타분석(Hart et al., 2009)에 의하면 기존 태도나 신념, 행동과 일치하는 정보에 대한

선호가 일치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선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d = 0.36$). 또한 이러한 편향은 방어 동기에 의해 조절되었는데 방어 동기가 일치에 따른 편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람들은 자신의 기존 신념이나 태도가 도전을 받으면 이를 유지하기 위해 편향적 정보처리를 하였고, 이는 정확성 동기에 비해 편향적 정보 처리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비록 동기라는 개념을 활용하지는 않았지만 다수의 선행 연구는 이러한 예상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한다. 예를 들어 로드와 동료들의 연구(Lord, Ross, & Lepper, 1979)에서 사형제도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사형제도에 호의적인 연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살펴본 결과, 사형 찬성론자들은 사형 반대론자에 비해 연구가 더욱 설득적이고 연구 품질이 우수하다고 평가하였다. 자신의 태도와 일치하는 결과를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스트라이엔 외(van Strien, Kammerer, Brand-Gruwel, & Boshuizen, 2016)의 연구에서 역시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불일치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비해 더 믿을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가짜뉴스와 유사한 맥락에서 자먼(Jarman, 2016)의 연구에서도 자신의 정치성향과 일치하는 정치 발언을 더욱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사람들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과정은 동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정확성 동기보다 방향성 동기가 강할 경우 사람들은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신념, 태도와 견주어 정보를 평가한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본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높이 평가되고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폄하된다. 가짜뉴스에 대한 현상적·경험적 논의들은 가짜뉴스가 반드시 이성적이고 증거에 기반한 사고에 의해 소비되고 평가되는 것은 아님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준다. CNN을 가짜뉴스 매체라 칭하며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화와 같이(Collinson, 2017) 어떤 이에게는 조선일보의 기사가, 어떤 이에게는 한겨레신문의 기사가 가짜뉴스로 지각될 수 있다. 즉, 가짜뉴스 여부조차 메시지에 담긴 주장의 진위를 검증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신념에 비추어 유리한 정보는 신뢰하고 불리한 정보는 가짜뉴스로 치부해 버리는 편향적 정보처리의 결과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한 태도가 신념과의 일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가짜뉴스에 대한 태도를 가짜뉴스에 대한 인식과 뉴스 전파 의도로 구분한다. 가짜뉴스에 대한 인식이 해당 뉴스가 가짜라고 생각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인지적 차원의 변인이라면 뉴스 전파의도는 해당 뉴스를 타인과 공유하고자 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행동적 차원의 변인이다. 가짜뉴스를 소비하고 믿음을 형성하는 것은 가짜뉴스 현상의 근원이지만 이를 전파하지 않는 이상 개인적 차원의 문제에 그칠 수 있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에 대한 믿음과 유용성 인식에 기반하여 뉴스를 전파하는 것은 가짜뉴스 생산에 참여하는 보다 적극적인 행위이며 가

짜뉴스 유통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짜뉴스 소비를 넘어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짜뉴스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짜뉴스에 대한 태도를 짜뉴스 인식과 뉴스 전파의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연구기설1) 짜뉴스와 기존 신념과의 일치 여부(불일치 vs. 일치)는 짜뉴스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기설1-1) 짜뉴스의 내용이 기존 신념과 불일치하면 짜뉴스 인식이 증가할 것이다.

연구기설1-2) 짜뉴스의 내용이 기존 신념과 불일치하면 뉴스 전파의도는 감소할 것이다.

2) 짜뉴스 대응책으로서의 팩트체크

짜뉴스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짜뉴스를 접하는 개인의 의식과 짜뉴스를 분별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다시 말해 뉴스 이용자 스스로 짜뉴스를 신뢰하지 않고 걸러내어 자연스러운 자정 작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에 짜뉴스의 대응책으로 거론되는 것 중 하나가 팩트체크이다. 팩트체크는 뉴스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주는 저널리즘의 한 형태로, 뉴스에 오류나 거짓이 존재하는지를 뉴스 이용자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Amazeen, 2015). 단순히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참과 거짓에 대한 판정을 내린다는 의미가 더 크다(정재철, 2017).

팩트체크의 효과에 대한 검증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 새롭게 얻은 정보가 팩트체크를 통해 부인된다면 정보에 대한 평가 절하가 발생해 정보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Garrett & Weeks, 2013). 실제 미국의 팩트체크 사이트 중 하나인 <플랙체크닷오알지(FlackCheck.org)>에 따르면 2012년 미국 대선 당시 팩트체크 사이트를 방문했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정치 관련 질문에 더욱 정확하게 응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amieson, 2012). 또한 팩트체크 노출이 증가할수록 정치와 관련한 검증된 사실에 대한 지식이 높아졌다(Gottfried, Hardy, Winneg, & Jamieson, 2013; Nyhan & Reifler, 2015). 국내에서는 팩트체크와 짜뉴스 인식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도 있는데 해당 연구에 따르면 팩트체크 보도를 접해본 사람들은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짜뉴스의 심각성 인식이 증가하였다(김선호·김위근, 2017).

팩트체크의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적으로 검증한 연구들도 다수 존재한다(Berinsky, 2015; Fridkin, Kenney, & Wintersieck, 2015; O'Sullivan & Geiger, 1995). 예를 들어 오설리번과 가이저(O'Sullivan & Geiger, 1995)는 팩트체크 보도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애드워치〉의 사실 검증 효과에 대한 실험연구를 진행하였다. 실험 참가자들은 네거티브 정치 광고에 대한 〈애드워치〉 검증 결과를 확인한 후 광고에 대해 평가하는 설문에 응답하였다. 그 결과 〈애드워치〉가 부정확하다고 판정한 광고는 정확하다고 판정한 광고에 비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최근 연구로서 프리드킨과 동료들(Fridkin et al., 2015)의 연구에서는 상원의원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정확하다고 주장하는 팩트체크를 읽은 사람들은 부정확하다는 팩트체크를 읽은 사람들에 비해 메시지의 정확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베린스키(Berinsky, 2015)의 실험에서도 팩트체크를 제시하는 경우 의료보험 정책 개정에 대한 잘못된 소문을 거부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은 팩트체크를 통해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잘못된 믿음이나 인식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팩트체크가 실패하는 경우도 존재한다(Ansolabehere & Iyengar, 1996; Kuklinski et al., 2000; Nyhan & Reifler, 2010; Thorson, 2016). 안솔라베르와 아이엔거(Ansolabehere & Iyengar, 1996)는 실험 집단을 민주당 후보에게 긍정적인 광고를 비판하는 〈애드워치〉, 공화당 후보에게 부정적인 광고를 비판하는 〈애드워치〉, 민주당 후보에게 부정적인 광고를 비판하는 〈애드워치〉 등 3개로 구분하여 후보에 대한 지지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애드워치〉에서 광고에 대해 비판적으로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들은 광고에서 옹호하는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한과 리플러(Nyhan & Reifler, 2010)의 연구는 대량 살상 무기, 세금 인하, 줄기 세포 등 다양한 주제의 기사들에 올바른 정보를 삽입하는 형식으로 팩트체크 효과를 살펴봤는데 줄기 세포 주제를 제외한 주제들에 대해서는 팩트체크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대량 살상 무기나 세금 인하와 같은 주제에서는 팩트체크를 제시한 경우 보수층의 잘못된 믿음을 오히려 강화시키기도 하였다. 팩트체크라는 개념을 도입하지는 않았지만 쿠클린스키 외(Kuklinski et al., 2000)는 1,160명의 대규모 샘플을 바탕으로 연방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이를 바로 잡아주는 정보를 제공했을 때의 반응을 확인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지 정책에 대해 잘못된 믿음을 지니고 있었고, 잘못 알고 있을수록 오히려 자신들의 믿음에 대한 자신감이 강해졌다. 이러한 믿음은 올바른 정보를 제시해도 변화하지 않았다. 톨슨(Thorson, 2016)의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잘못된 정보에 대한 정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을 유지하는 현상을 ‘신념의 메아리(belief echoes)’라 명명하였다.

실패의 원인은 심리적 저항(psychological reactance)에서 찾을 수 있다. 심리적 저항은 설득메시지의 역효과 또는 부메랑 효과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설득메시지로 인해 선택의 자유가 구속당하거나 위협당한다고 느끼는 상태를 의미한다(Brehm, 1966). 자유의 구속은 반드시 물

리적인 통제 행위라기보다는 개인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정서적·인지적 상태로(Brehm & Brehm, 1981) 자유의 회복은 통제를 가하는 대상에 대해 저항함으로써 이루어진다(Brehm, 1966; Brehm & Brehm, 1981). 선택의 자유가 침해되면 제한된 행동이 보다 더 매력적이라고 느끼게 되어 이를 행하려는 욕구가 강해지고(Brehm, 1966) 강한 설득메시지가 자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고 생각되면 정서적으로는 분노나 적대심이 인지적으로는 메시지에 대한 반박으로 저항을 표현하게 된다(Dillard & Shen, 2005). 즉,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정보에 대한 팩트체크는 심리적 저항을 유발하는 계기가 되며 선택의 자유를 회복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화된다. 따라서 팩트체크를 통한 정보의 정정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기존 신념과 일치하는 거짓 정보에 대해 더욱 호의적인 태도를 갖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듯 팩트체크의 설득 효과에도 가짜뉴스에 대한 신념 일치 여부가 영향을 미친다면 각 상황에서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팩트체크 전략은 어떤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음 절에서는 팩트체크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팩트체크 주장의 품질, 팩트체크 정보원 우호도, 기존 신념 등을 소개하고, 세 변인이 결합하여 어떠한 상호작용을 만들어내는지 예측해 보자 한다.

3) 팩트체크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팩트체크와 주장의 품질(argument quality)

팩트체크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는 팩트체크를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하는가이다. 모든 설득메시지는 겉으로 드러나든 그렇지 않든 주장을 담고 있다. 주장의 품질은 설득메시지에 담긴 주장에 대해 수용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주장의 타당도와 양, 이해도 등 다양한 요소를 바탕으로 판단된다(Chaiken, 1980). 주장의 품질은 강한 주장과 약한 주장으로 나뉘는데, 근거의 수가 많거나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강한 주장이 약한 주장에 비해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내 설득에 효과적이다(Petty & Cacioppo, 1986; Petty, Cacioppo, & Goldman, 1981).

주장의 품질과 설득 효과에 대한 연구는 정교화 가능성 모형(Elaboration Likelihood Model: ELM)이나 어림적 체계적 정보처리(Heuristic-Systematic Model of Information Processing: HSM) 등과 같은 이중 처리 모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들 모형에 따르면 사람들의 정보처리 과정은 중심적/체계적 또는 주변적/어림적 등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다(Eagly & Chaiken, 1993; Petty & Cacioppo, 1986). 중심적/체계적 처리는 설득메시지를

주의 깊게 처리하는 것으로 메시지의 내용이나 메시지 수용자의 사고를 기반으로 태도를 형성한다. 주변적/어림적 처리는 메시지의 내용 자체보다는 메시지의 환경적 요소에 담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단서를 활용해 메시지를 처리하고 태도를 형성한다.

주장의 품질은 메시지 수용자들이 메시지를 중심적/체계적 경로로 처리할 때 주로 영향을 미친다. 페티와 동료들은 다양한 실험을 통해 이를 증명해왔다. 예를 들어 관여도에 따른 정보처리와 그 결과를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관여도가 높은 경우(즉, 중심적 처리) 주장의 품질만이 메시지에 대한 동의에 영향을 미쳤지만 관여도가 낮은 경우(즉, 주변적 처리) 주장의 품질뿐만 아니라 정보원의 전문성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etty et al., 1981). 후속 연구에서는 정보원의 전문성 대신 정보원에 대한 호감도와의 관계를 확인하였는데 마찬가지로 고관여 상황에서는 주장의 품질에 따른 효과만이 태도에 영향을 미쳤지만 저관여 상황에서는 정보원에 대한 호감과 같은 주변적 단서 역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etty, Cacioppo, & Schumann, 1983). 하지만 이러한 결과가 주변적/어림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주장의 품질이 설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기존의 연구들은 어떠한 경로를 따르던 강한 주장은 약한 주장에 비해 설득 효과가 높다는 결과를 보고한다. 또한 카펜터(Carpenter, 2015)는 주장의 품질과 메시지 처리 경로의 상호작용을 살펴본 134건의 연구를 메타분석 하였다. 이에 따르면 비록 중심적 정보처리를 한 경우에 비해 효과 크기가 다소 감소하기는 하지만 정보를 주변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강한 주장은 약한 주장에 비해 설득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팩트체크의 설득 효과는 팩트체크에 담긴 주장의 품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강한 주장을 담은 팩트체크의 설득 효과는 약한 주장의 팩트체크에 비해 증가할 것이다. 주장의 품질은 근거의 양(Martin, Lang, & Wong, 2003), 근거의 타당성(Andrews & Shimp, 1990; Park, Levine, Westerman, Orfgen, & Foregger, 2007), 근거의 종류(Green, Garst, Brock, & Chung, 2006; Petty et al., 1981), 주장의 모호성(Chaiken & Maheswaran, 1994), 표현 방법(Gibbons, Busch, & Bradac, 1991; Hafer, Reynolds, & Obertynski, 1996; Lowrey, 1998)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작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짜뉴스가 거의 거짓이라는 팩트체크 결과를 판단의 근거와 함께 제시한 집단(강한 주장)과 근거 없이 결과만 제시한 집단(약한 주장)으로 나누어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비교해 보고자 한다.

연구기설2) 팩트체크 결과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 집단(강한 주장)은 팩트체크 결과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집단(약한 주장)에 비해 팩트체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높을 것이다.

(2) 팩트체크와 정보원(source)

팩트체크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은 정보원, 즉, 누가 팩트체크를 하는가다. 정보원은 팩트체크의 본질과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요소는 아니다. 하지만 주변적/어렵적 경로를 통한 설득의 경우 정보원은 메시지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단서로 작용할 수 있다. 같은 정보원이라도 그에 대한 신뢰도 평가는 수용자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동일한 주제에 대한 팩트체크를 동일한 매체가 진행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평가는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수성향의 사람들은 보수적인 매체의 팩트체크를 진보적인 매체의 팩트체크에 비해 신뢰하고 진보성향의 사람들은 진보적인 매체의 팩트체크를 보수적인 매체의 팩트체크에 비해 신뢰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적대적 매체 지각(hostile media perception)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적대적 매체 지각이란 어떠한 이슈에 대해 강한 신념이나 태도를 지닌 사람들은 해당 이슈에 대한 매체의 보도가 자신의 의견과 적대적인 방향으로 치우쳐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을 처음 이론화한 발론과 동료들(Vallon, Ross, & Lepper, 1985)의 연구에 따르면 베이루트 학살과 관련된 중립적 뉴스에 대해 친이שראל 성향의 수용자와 친이랍 성향의 수용자가 각각 뉴스가 자신의 생각과 반대 방향에 유리하게 편향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주제를 활용하여 진행된 후속 연구들에서도 동일한 경향이 발견되었다(Giner-Sorolla & Chaiken, 1994; Perloff, 1989).

레이드(Reid, 2012)는 적대적 매체 지각을 자기 범주화 이론(self-categorization theory)을 통해 설명한다. 자기 범주화 이론은 사람들이 성별, 나이, 정치성향 등의 사회 정체성에 따라 자기 개념(self concept)을 형성하고 이에 기반하여 자기와 타인을 이해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Turner, Hogg, Oakes, Reicher, & Wetherell, 1987). 사회 정체성은 외집단과 비교해 가장 차이는 내집단의 특성으로 판단의 기준이 되는 원형(prototype)을 형성한다. 특정한 사회 정체성이 활성화되면 자신이 속한 내집단은 동일한 원형을 공유하는 동질적인 집단이라고 판단하고 자신이 속하지 않은 외집단은 다른 원형을 지닌 이질적인 집단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사회 정체성에 따라 자신을 외집단과 구분하고 내집단의 성향이나 규범과 일치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구분을 강화한다(Turner et al., 1987). 이러한 성향은 내집단을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집단 편파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내집단의 메시지를 더욱 신뢰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Reid, 2012). 적대적 매체 지각이 사람들의 세계관이 편향 동화(biased assimilation) 되었기 때문이라는 차별적 기준에 따른 설명과 달리 자기 범주화에 기반한 설명에서는 메타대조 원리(meta contrast principle)를 근거로 제시한다. 메타대조는 사람들이 새로운 자극을 범주화할 때 다른 범주와의 차이점(intercategory difference)에 대한 같은 범주 내의 유사성(intracategory similarity)의 비율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것이다(Haslam & Turner, 1995). 즉, 정보를 판단함에 있어 정보 자체보다는 정보원이 나와 가까운 내집단인지 거리가 있는 외집단인지를 판단한 후 내집단 정보원의 정보에는 동화가 외집단 정보원의 정보에는 대조가 발생한다. 이 때 내집단과 외집단의 구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수용자가 자신의 위치가 정체성의 연속선상 어디에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데 따라 달라진다. 실제 레이드(Reid, 2012)는 실험 연구를 통해 이러한 설명을 검증하였는데 동일한 중립적인 정치 뉴스에 대해 정보원이 내집단일 경우 뉴스가 공정하다고 평가하였고 외집단일 경우 뉴스가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에 대해 편파적이라고 평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뉴스에 동의하는 정도도 외집단에 비해 내집단 정보원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정보원에 따라 팩트체크의 효과는 달라질 것이라 추론해 볼 수 있다. 즉, 팩트체크 정보원이 자신에게 우호적인 내집단 매체라고 인식할 경우 팩트체크 결과에 대한 신뢰는 증가할 수 있다. 반면 팩트체크 정보원이 자신에게 비우호적인 외집단 매체라고 인식할 경우 팩트체크 결과에 대한 신뢰는 감소할 것이다.

연구가설3) 우호 정보원의 팩트체크 결과를 확인한 집단은 비우호 정보원의 팩트체크 결과를 확인한 집단에 비해 팩트체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높을 것이다.

(3) 신념 일치와 팩트체크 효과

앞서 언급한 정교화 가능성 모형과 어렵적-체계적 모형은 정보처리의 이중 경로를 가정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정교화 가능성 모형은 두 경로가 독립적이고 배타적이라고 보는 반면 어렵적-체계적 모형은 두 경로를 통한 처리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한다(Chaiken, Liberman, & Eagly, 1989; Maheswaran & Chaiken, 1991). 다시 말해 주장의 품질과 같은 메시지의 본질적 내용과 정보원과 같은 주변적 단서는 서로 영향을 주며 통합적으로 해석되고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이에 팩트체크의 두 요소가 결합하였을 때 어떠한 상호작용을 만들어 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어렵적 처리와 체계적 처리의 상호작용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Bohner,

Moskowitz, & Chaiken, 1995; Chen & Chaiken, 1999). 먼저 가산 가설(addictivity hypothesis)에 따르면 어렵적 단서와 메시지의 주장이 일치하면 어렵적 처리와 체계적 처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Maheswaran, Mackie, & Chaiken, 1992). 예를 들어 소비자가 제품 광고에 대해 정보처리를 할 때 “유명 회사의 제품은 품질이 좋다”라는 어렵적 단서를 활용할 수 있다. 이 때 유명 회사 제품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등의 어렵적 단서와 일치하는 광고의 주장이 주어지면 어렵적 단서와 체계적 정보는 동등한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독립적으로 처리된다. 본 연구에 적용한다면 우호 정보원이 근거가 담긴 강한 주장의 팩트체크를 제시하는 경우로서 팩트체크의 효과가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메시지의 주장이 어렵적 단서와 불일치하는 경우 어렵적 단서는 약화된다. 이러한 상황을 희석 가설(attenuation hypothesis)이라 하는데 체계적 정보로 인해 어렵적 단서의 효과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Chaiken & Maheswaran, 1994; Maheswaran & Chaiken, 1991). 예를 들어 전문가 정보원이 일반인 정보원에 비해 신뢰도가 높은 것은 “전문가는 믿을 수 있다”라는 어렵적 규칙을 활용해 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의 메시지가 기대에 비해 수준이 낮은 경우 메시지의 품질로 인해 정보원에 대한 어렵적 단서가 약화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호 정보원이 약한 주장을 제시하거나 비우호 정보원이 강한 주장을 하는 경우로서, 정보원 우호도에 따른 효과는 희석되고 주장의 품질에 따라 팩트체크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즉, 주장의 품질에 따라서만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어렵적 단서와의 불일치가 항상 어렵적 단서의 효과를 희석시키는 것만은 아니다. 편향 가설(bias hypothesis)은 희석 가설과는 반대로 어렵적 단서로 인해 체계적 정보가 편향적으로 처리되는 경우다(Chaiken et al., 1989). 편향 가설은 사람들이 어렵적 단서에 대한 기대를 먼저 형성한 후 메시지에 노출되면 어렵적 단서의 영향을 받아 메시지를 편향적으로 해석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동기와 능력이 충분하여 비교적 정보를 명확하게 처리할 수 있을 때 발생하는 희석과는 달리 편향은 주어진 정보가 모호하여 여러 해석이 가능하거나 정보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아 수용자 스스로 판단을 내려야 할 때 주로 발생한다(Chaiken & Maheswaran, 1994; Chen & Chaiken, 1999). 이 가설에 따르면 비우호 정보원의 강한 주장이 우호 정보원의 약한 주장에 비해 효과가 낮게 나타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판단해 보면 앞서 팩트체크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언급한 주장의 품질(체계적 정보)과 정보원 우호도(어렵적 단서)는 동시적 혹은 상호적으로 역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팩트체크의 주장과 정보원에 대한 판단이 종합적으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각 요소에 대한 효과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따라서 팩트체크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상호작용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 때 가짜뉴스에 대한 신념 일치 여부가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체계적 정보와 어렵적 단서가 불일치 할 경우 어렵적 단서가 희석될 것인지 체계적 정보에 대한 편향적 처리가 일어날 것인지는 정보의 처리가 어떠한 경로를 중심으로 발생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팩트체크의 효과에 영향을 준다. 일반적으로는 정보처리 동기가 높은 사람들이 체계적 정보처리를 하지만 자신의 신념과 불일치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동기가 낮아도 시간과 인지적 자원을 들여 정보를 처리한다(Maheswaran & Chaiken, 1991). 투입되는 인지 자원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자신의 판단에 충분한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다(Chen & Chaiken, 1999; Maheswaran & Chaiken, 1991). 이를 충분성 역치(sufficiency threshold)라고 하는데(Maheswaran & Chaiken, 1991)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자신감이 실제 자신이 느끼는 자신감보다 높으면(즉, 충분성 역치를 넘지 못하는 경우) 정확한 판단을 위해 더 많은 정보를 검색하거나 논쟁 중인 주제에 대해 양쪽 입장을 모두 확인해 보는 등 체계적 처리가 증가한다. 물론 이때의 정보처리는 반드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은 아니어서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주장은 높게 평가하고 불일치하는 주장은 폄하하고 반박하는 편향이 나타나기도 한다(Taber, Cann, & Kucsova, 2009).

앞서 강한 주장이 약한 주장에 비해, 우호정보원의 팩트체크가 비우호정보원에 비해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하지만 어렵적-체계적 정보의 상호작용에 대한 논의에 따르면 정보를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체계적 정보와 어렵적 단서가 상충하면 어렵적 단서의 효과가 희석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가짜뉴스(즉, 신념과 불일치하는 팩트체크)에 노출되면 체계적 처리가 활성화되어 정보원 정보보다는 주장의 품질에 따라 팩트체크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반면 자신의 신념과 불일치하는 가짜뉴스를 거짓이라고 판명하는 팩트체크 결과와는 내적인 충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인지적 노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Chen & Chaiken, 1999). 그 결과 주장의 품질보다는 정보원이 팩트체크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쳐 우호정보원의 팩트체크가 비우호정보원보다 더 높은 효과를 이끌어 내는 어렵적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팩트체크를 구성하는 요소(즉, 주장과 정보원)의 상호작용 효과는 팩트체크의 대상이 되는 가짜뉴스에 대한 신념일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념 일치, 주장의 품질, 정보원 우호도라는 3개의 변인이 결합하여 만들어내는 3원 상호작용 효과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신념 일치, 주장의 품질, 정보원 우호도 등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변인들을 모두 포함한 것은 아니지만 어렵적-체계적 모형 관련 연구들은 변인 간의 상호작용을 부분적으로 유추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마틴과 동료들(Martin, Hewstone, & Martin, 2007)의 연구에 따르면 메시지

를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어렵적 단서와 관계없이 강한 주장에 대한 태도가 약한 주장에 비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메시지를 어렵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주장의 품질과는 관계없이 다수의 동의를 얻는 메시지에 더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였다. 보너와 동료들(Bohner, Ruder, & Erb, 2002)의 연구에서도 설득메시지가 기대에 위배되는 경우 메시지에 대한 체계적 처리가 증가하고 정보원의 전문성보다는 메시지의 품질에 따라 메시지를 평가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제인과 마히스와란(Jain & Maheswaran, 2000)의 경우에도 주장의 품질에 따른 설득의 차이가 선호 일치 조건보다 선호 불일치 조건에서 더욱 명확하게 나타나는 조절 효과가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가짜뉴스에 대한 신념 일치 여부는 팩트체크 주장의 품질과 정보원 우호도가 팩트체크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의 경우 체계적 정보처리를 강화하여 메시지에 관련된 요인의 영향을 받아 설득이 이루어질 것이고 자신의 신념과 불일치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의 경우 메시지 외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아 설득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체계적 처리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강력한 주장이 약한 주장에 비해 설득적일 것이라는 예상은 비교적 명확한 데 반해 어렵적 처리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주장의 품질과 정보원 호의도 간의 상호작용이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날지는 단정하기 쉽지 않다. 이는 메시지에 대해 정보원이 미치는 영향이 부정과 긍정 양방향 모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Bohner et al., 200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 변인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논의는 연구문제로 제시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문제1) 팩트체크 주장의 품질과 정보원 우호도가 팩트체크 평가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는 가짜뉴스에 대한 기존 신념과의 일치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인가?

한편, 팩트체크가 가짜뉴스의 대응책으로서 기능하는지 확인하려면 팩트체크에 대한 평가가 가짜뉴스 인식과 뉴스 전파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설득메시지에 대한 평가는 태도 변화나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Cho & Choi, 2010; Dillard, Weber, & Vail, 2007; Hullett & Boster, 2001). 설득메시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증가하면 설득 효과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인식된 메시지의 효과와 메시지의 실제 효과의 상관관계를 보고한 40건의 연구를 메타 분석한 결과 설득메시지에 대한 평가는 메시지의 실제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r = .4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Dillard et al., 2007). 이러한 결과가 적용된다면 팩트체크에 대한 평가가 궁극적으로 가짜뉴스가 거짓이라고 판단하는 인식을 증가시키고 가짜뉴스 전파의도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팩트체크 주장의 품질, 정보원 우호도, 가짜뉴스에

대한 신념 일치와 상호작용이 팩트체크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가짜뉴스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된 매개 모형을 검증하여 팩트체크와 가짜뉴스 인식의 관계를 정교화 할 것이다.

연구문제2) 팩트체크에 대한 평가는 팩트체크 주장의 품질이 가짜뉴스 인식과 뉴스 전파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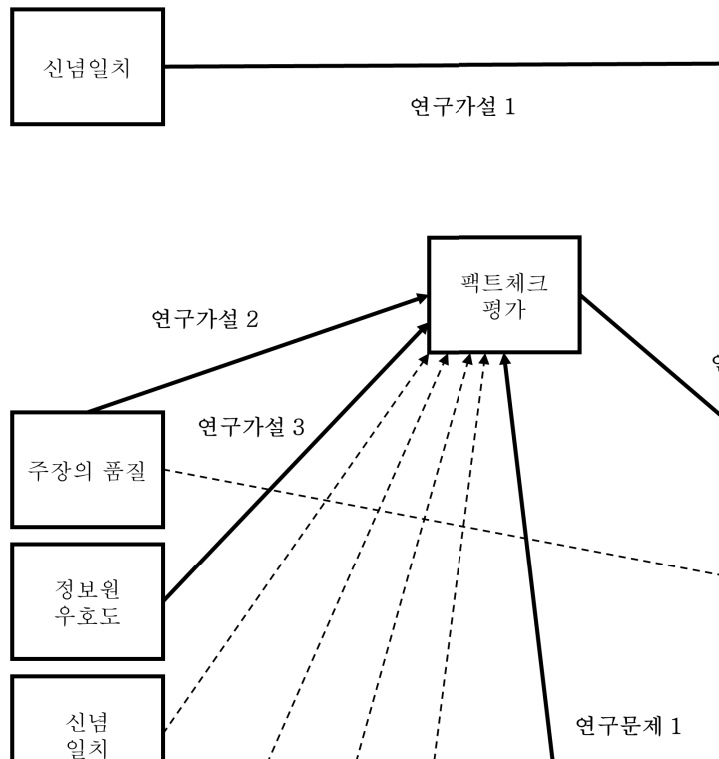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3. 방법론

1) 연구 설계

본 연구의 목적은 가짜뉴스가 주장하는 내용이 기존 신념과 일치하는가에 따라 가짜뉴스 인식과 팩트체크 효과가 달라지는지 확인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가짜뉴스와의 신념 일치 여부: 일치

vs. 불일치)×2(팩트체크 주장의 품질: 강 vs. 약)×2(팩트체크 정보원: 우호 vs. 비우호) 요인 설계를 적용하여 실험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험 참가자는 먼저 가짜뉴스를 읽은 후 가짜뉴스에 대한 인식을 측정한다(연구가설1). 이후 해당 뉴스가 거짓이라는 팩트체크 결과를 확인하고 팩트체크에 대한 평가(연구가설2-3, 연구문제1)와 앞서 본 가짜뉴스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설문 문항에 응답하였다(연구문제2).

연구는 전문 조사업체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하여 2017년 10월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총 446명의 실험 참가자 중 49.8%는 남성, 50.2%는 여성이었으며 연령대별로는 20대 19.5%, 30대 18.8%, 40대 19.7% 50대 21.3% 60세 이상 21.6%이었다 ($M = 44.39$, $SD = 13.79$).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18.8%, 2년제 전문대 졸업 또는 재학이 13.7%, 4년제 대학교 졸업 또는 재학이 53.4%, 대학원 졸업 또는 재학이 14.1%이었으며 실험 참가자의 정치성향¹⁾은 보수 49.8%, 진보 50.2%로 나타났다.

2) 실험물

가짜뉴스의 주제는 정치적 신념에 따라 찬반이 나뉠 수 있는 정책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진보성향의 주제로는 차별금지법을, 보수성향의 주제로는 테러방지법을 선정하였다. 사전조사²⁾ 결과 진보성향의 응답자($M = 4.07$, $SD = 1.02$)가 보수성향의 응답자($M = 3.58$, $SD = 1.04$)에 비해 차별금지법에 찬성하였고($t(433) = 4.85$, $p = .000$) 보수성향의 응답자($M = 4.30$, $SD = 0.93$)가 진보성향의 응답자($M = 3.72$, $SD = 1.22$)에 비해 테러방지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433) = 5.33$, $p = .000$). 이에 해당 정책이 정치 성향에 따라 찬반 의견이 나누어질 수 있는 주제로 판단하여 본 실험에 활용하였다. 또한 정보원의 경우에도 사전조사³⁾ 결과 진보성향의 응답자($M = 4.13$, $SD = 1.00$)가 보수성향의 응답자($M = 3.03$, $SD = 1.17$)에 비해 JTBC를 선호하였고($t(190) = 6.99$, $p = .000$) 보수성향의 응답자($M = 2.59$, $SD = 0.97$)가 진보성향의 응답자($M = 2.59$, $SD = 1.03$)에 비해 TV조선에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t(190) = 3.37$, $p = .001$) 진보성향에 우호적인 매체로 JTBC를 보수성

1) 본 설문을 시작하기 전 자신의 정치성향을 ‘매우 보수적-중도-매우 진보적’의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한 후 중도라고 응답한 참가자를 제외한 나머지 참가자만을 본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측정은 의미 분별 척도를 활용하여 “나는 차별금지법/테러방지법을 지지하지 않는다-지지한다”, “나는 차별금지법/테러방지법에 반대한다-찬성한다”의 두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3) 측정은 의미 분별 척도를 활용하여 “나는 JTBC/TV조선이 싫다-좋다”의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향에 우호적인 매체로 TV조선을 선정하였다.

가짜뉴스 실험물은 해당 정책 대한 잘못된 믿음을 소재로 정책의 취지와 의미를 왜곡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가짜 근거를 사용하는 가상의 가짜뉴스를 온라인 뉴스 형식으로 제작하였다. 팩트체크 실험물은 주장의 품질(강 vs. 약)과 정보원(JTBC vs. TV조선)을 조작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주장의 품질은 팩트체크 결과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조건을 강한 주장,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조건을 약한 주장으로 조작화하였다. 강한 주장은 팩트체크 결과를 제시하고 이후 판단의 근거를 기관의 발표나 법령에 기초해 설명한 반면, 약한 주장은 팩트체크 결과만 제시하고 근거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보원은 동일한 메시지에 매체명만 교체하였다. 구체적인 실험 메시지는 <부록I>과 <부록II>에 제시하였고, 실험참가자들에게 제시된 실험물 예시는 <부록III>과 <부록IV>에 제시하였다.

3) 측정 문항

(1) 독립변인

독립 변인 중 신념 일치와 정보원 우호도는 측정변인을 재코딩 후 사용하였다. 먼저 신념 일치는 응답자의 정치 성향에 따라 보수와 진보 집단으로 나눈 뒤 보수(진보)성향의 응답자가 차별금지법(테러방지법) 관련 가짜뉴스에 노출된 경우 일치 조건으로, 보수(진보)성향의 응답자가 테러방지법(차별금지법) 관련 가짜뉴스에 노출된 경우 불일치 조건으로 재코딩하였다.

표 1. 정치성향별 가짜뉴스와 신념 일치 여부

주제	가짜뉴스의 내용	정치성향	일치 여부 및 이유	
			일치	불일치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의 여러 요소 중 일부에 불과한 동성애 관련 내용을 확대해석하고 사실과 다른 근거와 예시를 제시하여 차별금지법의 본 취지를 왜곡함	보수	일치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보수성향의 사람들에게는 차별금지법의 의미를 폄훼하고 평가 절하하는 가짜뉴스가 자신들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로 받아들여짐
		진보	불일치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진보성향의 사람들에게는 차별금지법의 의미를 폄훼하고 평가 절하하는 가짜뉴스가 자신들의 신념과 불일치하는 정보로 받아들여짐
테러방지법	법으로 규정된 테러 위험인물의 범위를 일반 국민 전체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확대해석하고 사실과 다른 근거와 예시를 제시하여 테러방지법의 본 취지를 왜곡함	진보	일치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진보성향의 사람들에게는 테러방지법의 의미를 폄훼하고 평가 절하하는 가짜뉴스가 자신들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로 받아들여짐
		보수	불일치	테러방지법을 찬성하는 보수성향의 사람들에게는 테러방지법의 의미를 폄훼하고 평가 절하하는 가짜뉴스가 자신들의 신념과 불일치하는 정보로 받아들여짐

정보원 우호도는 보수(진보)성향의 응답자가 TV조선(JTBC)의 팩트체크에 노출된 경우 우호 조건으로 보수(진보)성향의 응답자가 JTBC(TV조선)의 팩트체크에 노출된 경우 비우호 조건으로 재코딩하였다.

표 2. 정치성향과 정보원 우호도 구분

정보원 우호도	정치성향	노출 매체
우호	보수	TV조선
	진보	JTBC
비우호	보수	JTBC
	진보	TV조선

(2) 종속변인

팩트체크 평가는 팩트체크의 효과성 인식으로 기존 연구들(Cho & Choi, 2010; Dillard et al., 2007)을 참고하여 “강력한 주장이다”, “논리적이다”, “타당하다”, “설득적이다”의 4문항에 대해 (1) 전혀 그렇지 않다-(5)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M = 3.17, SD = 0.97$; Cronbach $\alpha = .87$).

가짜뉴스 인식은 노출된 기사를 가짜뉴스라고 판단하는 정도로 “방금 본 뉴스는 거짓일 것이다”, “방금 본 뉴스는 부정확하다”, “방금 본 뉴스는 가짜뉴스일 것이다” 등 3문항을 (1) 전혀 그렇지 않다-(5)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M = 3.66, SD = 1.26$; Cronbach $\alpha = .94$).

뉴스 전파의도는 기존 연구(Lee & Oh, 2017; Schultz, Utz, & Göritz, 2011)를 참고하여 “나는 이러한 뉴스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것이다”, “나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뉴스에 대해 이야기 할 것이다”의 2문항을 이용하였고 (1) 전혀 그렇지 않다-(5)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M = 2.64, SD = 1.18$; $r = .95$).

(3) 조작 검증

주장의 품질에 대한 조작 검증은“(방금 본 팩트체크는) 팩트체크 결과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문항에 (1) 전혀 그렇지 않다-(5)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확인하였고, 정보원 우호도에 대한 조작 검증은 “팩트체크를 진행한 언론사는 차별금지법(테러방지법)에 대한 나의 의견에 얼마나 우호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1) 매우 비우호적이다-(5) 매우 우호적이다의 5점 척도로 확인하였다.

4. 연구 결과

1) 조작 검증 결과

가설 검증에 앞서 조작 검증 문항에 대한 t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주장의 품질의 경우 강한 집단($M = 3.50, SD = 0.87$)은 약한 집단($M = 2.74, SD = 1.01$)에 비해 팩트체크가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t(444) = 8.54, p < .001$). 정보원 우호도의 경우 자신의 정치 성향과 일치하는 정보원에 노출된 집단($M = 3.22, SD = 0.77$)은 일치하지 않는 정보원에 노출된 집단($M = 2.94, SD = 0.90$)에 비해 정보원을 우호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444) = 3.51, p < .001$).

2) 연구 결과

연구가설1은 가짜뉴스와 기존 신념과의 일치 여부가 가짜뉴스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신념 일치 여부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가짜뉴스 인식과 뉴스 전파 의도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t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자신의 기존 신념과 불일치하는 가짜 뉴스를 접한 응답자($M = 3.19, SD = 0.94$)는 일치하는 가짜 뉴스를 접한 응답자($M = 2.78, SD = 0.97$)에 비해 가짜뉴스라는 인식이 증가하였다($t(444) = -4.63, p < .001$). 또한 자신의 신념과 불일치하는 가짜 뉴스를 접한 응답자($M = 2.68, SD = 1.04$)는 일치하는 가짜 뉴스를 접한 응답자($M = 2.87, SD = 1.01$)에 비해 뉴스 전파의도가 감소하였다($t(444) = 1.96, p = .05$). 따라서 연구가설1은 지지되었다.

표 3. 기존 신념과의 일치 여부에 따른 가짜뉴스 인식과 뉴스 전파의도

	일치	불일치	<i>t</i>	<i>p</i>
	<i>M (SD)</i>	<i>M (SD)</i>		
가짜뉴스 인식	2.78 (0.97)	3.19 (0.94)	-4.63	.000
뉴스 전파의도	2.87 (1.01)	2.68 (1.04)	1.96	.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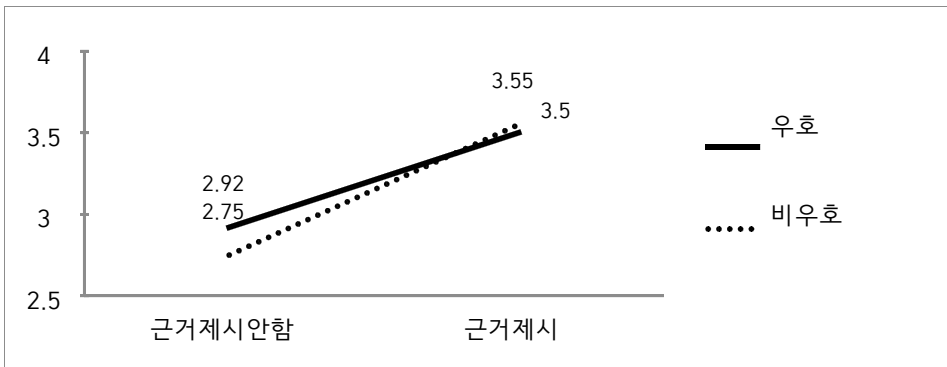
연구가설2와 연구가설3, 연구문제1은 팩트체크에 노출된 후 실험 참가자들이 팩트체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팩트체크 주장의 품질, 정보원 우호도, 가짜뉴스와의 신념 일치 여부를 독립변인으로 팩트체크 평가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3원 변량 분석(3-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연구가설2는 팩트체크 주장의 품질에 따라 팩트체크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팩트체크 결과에 대한 근거를 제시받은 강한 주장 집단의 응답자($M = 3.46$, $SD = 0.73$)는 근거를 제시받지 않은 약한 주장 집단의 응답자($M = 2.90$, $SD = 0.83$)에 비해 팩트체크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 438) = 54.95$, $p < .001$). 따라서 연구가설2는 지지되었다.

연구가설3은 팩트체크 정보원에 따라 팩트체크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것인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연구 결과 우호정보원의 팩트체크($M = 3.24$, $SD = 0.84$)는 비우호정보원의 팩트체크($M = 3.11$, $SD = 0.82$)에 비해 긍정적으로 평가 받기는 했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F(1, 438) = 2.65$, $p = .104$). 따라서 연구가설3은 기각되었다.

연구문제1은 팩트체크 주장의 품질과 정보원 우호도가 팩트체크 평가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가 가짜뉴스와의 신념 일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지 살펴보는 것이었다. 연구 결과 신념과의 일치 여부에 따라 메시지 품질과 정보원 우호도의 상호작용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F(1, 438) = 5.42$, $p = .020$). 신념 일치 상황에서는 우호정보원의 강한 주장($M = 3.50$, $SD = 0.61$)이 약한 주장($M = 2.92$, $SD = 0.70$)에 비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p = .041$), 비우호정보원 역시 강한 주장에 대한 평가($M = 3.55$, $SD = 0.68$)가 약한 주장($M = 2.75$, $SD = 0.87$)에 비해 긍정적이었다($p = .015$).



반면 신념 불일치 상황에서는 우호정보원은 강한 주장에 대한 평가($M = 3.59$, $SD = 0.86$)가 약한 주장($M = 2.95$, $SD = 0.95$)에 비해 증가하였지만($p = .009$) 비우호정보원은 강한 주장($M = 3.18$, $SD = 0.69$)과 약한 주장($M = 3.00$, $SD = 0.80$)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p = .0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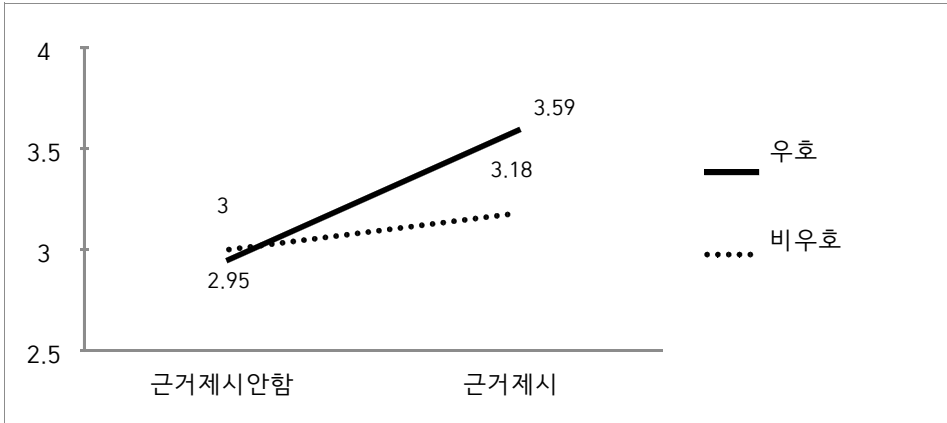


표 4. 가짜뉴스와의 신념 일치, 주장의 품질, 정보원 우호도가 팩트체크 평가에 미치는 효과

	<i>df</i>	<i>F</i>	η^2	<i>p</i>
주장의 품질(A)	1	54.95	.11	.000
정보원 우호도(B)	1	2.65	.01	.104
일치(C)	1	0.00	.00	.990
A×B	1	0.62	.001	.431
A×C	1	3.73	.01	.054
B×C	1	0.60	.001	.438
A×B×C	1	5.42	.01	.020
집단 내 오차	438	(0.61)		

주: 괄호안의 수치는 오차제곱평균(MSE)을 나타냄.

연구문제2는 팩트체크에 대한 평가가 가짜뉴스에 대한 평가의 매개 변인으로 작용하는지 살펴보는 것이었다. 앞선 분석을 통해 팩트체크 평가에 대해 가짜뉴스와의 신념 일치, 주장의 품질, 정보원 우호도의 상호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기에 본 연구문제는 이들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매개 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은 프로세스(PROCESS) 매크로(Hayes, 2013)를 활용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전통적으로 매개 분석은 바론과 케니(Baron & Kenny, 1986)의 인과 단계 방법(causal steps approach)이나 소벨 검증(Sobel test)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인과 단계 방법의 경우 매개변인을 경유하여 발생하는 간접효과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고 소벨 검증은 정규 분포를 가정한다는 제약이 존재한다. 이에 비해 부트스트래핑은 반복된 대표본추출(resampling) 작업을 통해 정규 분포에 대한 가정 없이 신뢰구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간접효과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Hayes, 2013). 부트스트래핑의 가장 큰 문제는 수천 번 이상 실시되는 대표본추출 작업을 계산해 내는 것이 어렵다

는 점이었으나 기술의 발달로 이러한 문제가 거의 해결되어 최근 유용한 매개 분석방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특히 프로세스 매크로를 활용하면 단순 매개 과정뿐 아니라 매개변인이 조절변인에 의해 달라지는, 다양한 양상의 조건적 간접효과(conditional indirect effect)를 검증할 수 있다.

가짜뉴스 인식의 경우 팩트체크에 대한 평가는 가짜뉴스 인식에 양적 영향을 미쳤으며 95% 신뢰 구간이 (.1269, .373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5〉 참고). 이는 팩트체크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앞서 본 뉴스가 가짜뉴스일 것이라는 인식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조절된 매개 지수 확인 결과 지수값(-.1725)의 95% 신뢰구간이 (-.4093, -.0326)로 나타나 팩트체크 주장의 품질, 정보원 우호도, 가짜뉴스와의 신념 일치 여부에 의해 조절된 매개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고).

표 5. 가짜뉴스 인식에 대한 팩트체크 평가의 조절된 매개 효과(N = 446)

	팩트체크 평가				가짜뉴스 인식			
	B	SE	t	p	B	SE	t	P
주장의 품질(A)	.58	0.15	3.84	<.001	-.09	0.10	-0.85	.39
정보원 우호(B)	-.18	0.15	-1.21	.23				
일치(C)	.03	0.15	0.20	.84				
A×B	.23	0.21	1.08	.28				
A×C	.06	0.21	0.28	.78				
B×C	.23	0.21	1.11	.27				
A×B×C	-.69	0.30	-2.33	.02				
팩트체크 평가					.25	0.06	3.98	<.001
	$R^2 = .14$				$R^2 = .04$			

뉴스 전파의도의 경우 팩트체크에 대한 평가는 뉴스 전파의도에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95% 신뢰 구간이 (.0182, .2677)로 이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6〉 참고). 이는 팩트체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증가할수록 앞서 본 가짜뉴스를 전파하려는 의도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조절된 매개 지수 확인 결과 지수값(.0985)의 95% 신뢰 구간이 (-.2891, -.0024)로 나타나 팩트체크 주장의 품질, 정보원 우호도, 신념 일치 여부에 의해 조절된 매개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고).

표 6. 뉴스 전파에 대한 팩트체크 평가의 조절된 매개 효과(N = 446)

	팩트체크 평가				뉴스 전파의도			
	B	SE	t	p	B	SE	t	p
주장의 품질(A)	.58	0.15	3.84	<.001	-.13	0.11	-1.19	.24
정보원 우호(B)	-.18	0.15	-1.21	.23				
일치(C)	.03	0.15	0.20	.84				
A×B	.23	0.21	1.08	.28				
A×C	.06	0.21	0.28	.78				
B×C	.23	0.21	1.11	.27				
A×B×C	-.69	0.30	-2.33	.02				
팩트체크 평가								
$R^2 = .14$				$R^2 = .01$				

표 7. 가짜뉴스 인식과 뉴스 전파의도에 대한 팩트체크 평가의 조절된 매개 모형 검증

종속변인	Index	Boot SE	95% CI	
			BootLLCI	BootULCI
가짜 뉴스 인식	-.1725	0.10	-.4093	-.0326
뉴스 전파의도	.0985	0.07	-.2891	-.0024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가짜뉴스의 심리적 기제를 확인하고 대응책으로서 팩트체크의 효과가 존재하는지 검증하는 것이었다. 특히 그동안 제기되었던 수용자의 기존 신념이 가짜뉴스 인식과 팩트체크 효과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의 문제에 주목하였다. 연구 결과 가짜뉴스에 대한 태도와 팩트체크 효과는 가짜뉴스와 기존 신념과의 일치 여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과 불일치하는 뉴스를 가짜뉴스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그러한 뉴스를 전파하고자 하는 의도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우호적으로 받아들이고 불일치하는 정보는 폄하하거나 부정한다는 기존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Jarman, 2016; Lord et al., 1979; van Strien et al., 2016). 나아가 지금까지 가짜뉴스 관련 논의에서 자주 등장하였던 가짜뉴스에 대한 믿음과 개인의 신념과의 관계에 대해(황용식·권오성, 2017; Allcott & Gentzkow, 2017) 실증적인 검증이 이루어진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팩트체크의 효과 역시 기존 신념의 영향을 받았다. 가짜뉴스와의 신념 일치 여부는 팩트체크 주장의 품질과 정보원에 대한 우호도가 팩트체크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였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신념과 불일치하는 정보에 대한 체계적 처리는 자신의 태도를 방어하기 위해 발생하기 때문에 동기화된 추론을 증가시키고 판단의 정확성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이 우세하였다

(Kahan, 2013). 체계적 처리가 발생하는 이유가 신념과 반대되는 주장을 반박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다(Taber et al., 2006). 이 설명대로라면 팩트체크 주장의 품질이나 정보원과 관계없이 신념과 일치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는 평가절하되어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연구의 결과는 팩트체크 주장의 품질이 강한 경우 정보원에 관계없이 팩트체크에 대한 평가가 상승하였다. 즉, 가짜뉴스는 신념과의 일치 여부에 따라 편향적으로 평가되지만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여 이에 대해 반박한다면 비록 신념과 일치하는 기사에 대한 반박이라 할지라도 설득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진행된 한 연구에서 유사한 논의를 발견 할 수 있다(Pennycook & Rand, 2017). 해당 연구에서는 분석적 사고(analytic thinking)가 가짜뉴스와 진짜뉴스의 정확한 분별을 증가시켰고, 사람들이 분석적 사고를 할 경우 정치적으로 일치하더라도 가짜뉴스를 거부하였다. 저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가짜뉴스를 믿는 것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고에 실패(fail to think)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적절한 사고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동거적 추론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 전문 지식이 필요한 과학적 이슈(Kahan et al., 2012)의 경우 방향성 동기가 더욱 강화되었지만, 종교적 믿음(Gervais & Norenzayan, 2012)이나 도덕적 판단(Pennycook, Cheyne, Barr, Koehler, & Fugelsan, 2014), 음모론(Swami, Voracek, Stieger, Tran, & Furnham, 2014)과 같이 다소 직관적 판단이 가능한 주제의 경우 분석적 사고가 믿음을 완화시키는 결과가 발견되어 이러한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기도 한다. 이번 연구에서 사용된 가짜뉴스의 주제 역시 이해를 위해 높은 정치 지식을 요하는 내용은 아니었기에 후자의 주제들과 맥을 같이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저자들은 가짜뉴스와 진짜뉴스를 구별하는 작업이 응답자들이 보다 분석적인 사고를 하도록 만들고 가짜뉴스에 속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접종(inoculation) 처치가 되었을 것이라 주장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결과가 나온 배경에 대해서는 좀더 다양한 주제와 맥락의 연구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증이 되어야 하겠지만 해당 연구는 가짜뉴스의 맥락 하에서 분석적 사고가 동기화된 추론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보여주었고(Pennycook & Rand, 2017) 본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신념과 일치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의 경우 정보원 우호도와 관계없이 강한 주장의 설득 효과가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원 우호도의 주효과를 예측하였다. 효과의 강도에 차이가 존재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호정보원이 비우호정보원에 비하여 설득 효과가 높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실제 적대적 매체 지각의 이론틀 내에서 내집단 정보원과 외집단 정보원을 비교한 관련 연구들에서는 내집단 정보원을 외

집단 정보원에 비해 우호적으로 느껴 정보원 신뢰와 설득 효과가 증가하였다(Reid, 2012; Turner, 2007). 하지만 연구결과 정보원의 주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비우호정보원도 팩트체크 결과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면 긍정적인 평가가 증가하였고, 우호정보원이라도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팩트체크에 대한 평가가 낮아졌다. 이는 체계적 정보에 의해 어렵적 단서의 효과가 사라지는 희석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어렵적 단서의 희석은 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능력과 동기를 갖춰 체계적 정보처리가 중심이 될 때 주로 발견되며(Chaiken & Maheswaran, 1994; Chen & Chaiken, 1999) 특히 기준에 가지고 있던 어렵적 규칙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를 처리할 때 더욱 강화된다(Maheswaran & Chaiken, 1991).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가짜 뉴스에 대해 그것이 거짓이라는 결과를 제시하는 팩트체크는 일차적으로 체계적 처리를 증가시키는 상황적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우호정보원에 대한 신뢰가 증가하는 것은 우호정보원이 자신과 동질적인 내집단일 것이라는 어렵적 규칙 때문인데 우호정보원이 자신의 신념과 다른 팩트체크를 제시하는 것은 이러한 규칙에 위배되므로 희석 효과가 증폭될 수 있다. 그 결과 우호정보원이 제대로 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자신의 신념과 반하는 팩트체크 결과를 제시하면 비우호정보원이 근거를 제시할 때에 비해 팩트체크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

한편 신념과 불일치하는 가짜뉴스의 경우 다소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신념과 불일치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우호정보원이 비우호정보원에 비해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경향이 나타났다. 신념과 불일치하는 뉴스는 이미 가짜뉴스라는 인식이 높기 때문에 팩트체크 결과에 대해 거부감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념과 일치하는 경우와는 달리 정보원 단서에 영향을 받는 어렵적 정보처리가 이루어졌다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우호정보원의 주장의 품질이 약하면 팩트체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주장의 품질이 강할 때에 비해 감소하였다. 이는 어렵적 단서와 체계적 정보의 대조 가설로 설명할 수 있다. 앞서 어렵적 단서와 체계적 정보의 상호작용은 세 종류로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보너 외(Bohner et al., 1995)는 이 중 편향 가설의 편향적 정보처리가 대조와 동화의 양방향으로 발생한다고 하였다. 사람들은 메시지를 처리하기 전 어렵적 단서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는데 대조는 설득메시지가 처음 가졌던 기대와 어긋날 때 발생하는 것으로 메시지에 대한 부정적 편향이 나타난다. 반면 동화는 기대와 일치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메시지에 대한 긍정적 편향이 나타난다. 보너는 이후 연구를 통해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였는데 신뢰도가 높은 정보원이 약한 주장을 할 경우 메시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감소하였다(Bohner et al., 2002). 이와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도 우호정보원이 팩트체크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대조 효과가 발생해 팩트체크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우호정보원의 약한 주장에 대한 평가는 비우호정보원의 수준으로 떨어졌다.

가짜뉴스는 거짓 정보가 유통되는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가공된 가짜뉴스가 해당 집단 내에서 공유되고 확산됨으로써 잘못된 신념을 강화한다는 점이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신념과 불일치하는 가짜뉴스는 무시되지만 신념과 일치하는 가짜뉴스는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가짜뉴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신념과 일치하는 가짜뉴스일 것이다. 본 연구에 따르면 신념과 일치하는 가짜뉴스라도 적절한 조건 하에서는 잘못된 인식이 정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이는 거짓 정보에 대한 믿음을 이어가는 것이 신념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 태도라기보다 적절한 사고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능케 한다(Pennycook & Rand, 2017). 따라서 가짜뉴스 수용자들이 이성적이고 분석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가짜뉴스에 대한 잘못된 신념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팩트체크 주장의 품질이 가짜뉴스 인식에 미치는 효과가 팩트체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 의해 매개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팩트체크 효과 과정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키고, 향후 팩트체크 효과 연구가 일차적으로는 팩트체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지닌 한계와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무선 배치를 기반으로 한 실험설계로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외 변인을 대체로 통제하였다고 판단되지만 이에 대한 검증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특히 실험물로 사용된 정책(차별금지법과 테러방지법)에 대한 사전 지식은 가짜뉴스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요소로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주장의 품질을 팩트체크 주장(앞서 본 가짜뉴스가 거의 거짓이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지 여부를 통해 조작하였다. 관련 선행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품질의 차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처치였지만 팩트체크에 포함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풍부하게 담아내지는 못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주장의 논리성, 근거의 수 등 기존 논의에서 사용된 다양한 요소들을(Petty et al, 1981) 포함해 보는 것도 의미있는 작업이라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짜뉴스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지만 팩트체크의 목적이 저널리즘의 진위에 대한 판단이라면 진짜뉴스(거짓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뉴스)도 팩트체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팩트체크의 대상을 가짜뉴스뿐만 아니라 실제뉴스도 포함하여 두 대상에 대한 팩트체크 효과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선호·김위근 (2017). 팩트체크에 대한 언론수용자 인식. <신문과방송>, 8월호, 24-26.
- 김위근·남유원 (2016). <2016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정재철 (2017). <팩트체크 진실을 여는 문>. 서울: 한솔수북.
- 최홍규 (2017). 가짜뉴스 관련 논점과 페이스북·구글의 대응 방안. <KISA Report>, 2호, 8-16.
- 한상기 (2017). 가짜뉴스의 현황과 원인, 그리고 대응 방안. <KISA Report>, 2호, 3-7.
- 황용석·권오성 (2017). 가짜뉴스의 개념화와 규제수단에 관한 연구. <언론과법>, 16권 1호, 53-101.
- Allcott, H., & Gentzkow, M. (2017). Social media and fake news in the 2016 elec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31(2), 211-236.
- Amazeen, M. A. (2015). Revisiting the epistemology of fact-checking. *Critical Review*, 27(1), 1-22.
- Andrews, J. C., & Shimp, T. A. (1990). Effects of involvement, argument strength, and source characteristics on central and peripheral processing of advertising. *Psychology & Marketing*, 7, 195-214.
- Ansolabehere, S., & Iyengar, S. (1996). Can the press monitor campaign advertising? An experimental study. *Harvard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Politics*, 1(1), 72-86.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 -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ohner, G., Moskowitz, G. B., & Chaiken, S. (1995). The interplay of heuristic and systematic processing of social information.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6(1), 33-68.
- Bohner, G., Ruder, M., & Erb, H. P. (2002). When expertise backfires: Contrast and assimilation effects in persuasion.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1(4), 495-519.
- Berinsky, A. J. (2015). Rumors and health care reform: Experiments in political misinformation.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7(2) 1-22.
- Brehm, J. W. (1966). *A theory of psychological reactance*. New York, NY: Academic Press.
- Brehm, S. S., & Brehm, J. W. (1981). *Psychological reactance: A theory of freedom and*

- control*. New York, NY: Academic Press.
- Carpenter, C. J. (2015). A Meta Analysis of the ELM's Argument Quality× Processing Type Predictions.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41(4), 501-534.
- Chaiken, S. (1980). Heuristic versus systematic information processing and the use of source versus message cues in persua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5), 752-766.
- Chaiken, S., Liberman, A., & Eagly, A. H. (1989). Heuristic and systematic processing within and beyond the persuasion context. In J. S. Uleman & J. A. Bargh (Eds.), *Unintended thought* (pp. 212-252). New York: Guilford.
- Chaiken, S., & Maheswaran, D. (1994). Heuristic processing can bias systematic processing: Effects of source credibility, argument ambiguity, and task importance on attitude judg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460-460.
- Chen, S., & Chaiken, S. (1999). The heuristic-systematic model in its broader context. In S. Chaiken & Y. Trope (Eds.), *Dual-process theories in social psychology* (pp. 73 - 96). New York, NY: Guilford Press.
- Cho, H., & Choi, J. (2010). Predictors and the role of attitude toward the message and perceived message quality in gain-and loss-frame antidrug persuasion of adolescents. *Health Communication*, 25(4), 303-311.
- Collinson, S. (2017, 2, 16). An amazing moment in history: Donald Trump's press conference. CNN. Retrieved from <http://edition.cnn.com/2017/02/16/politics/donald-trump-press-conference-amazing-day-in-history/index.html>
- Dillard, J. P., & Shen, L. (2005). On the nature of reactance and its role in persuasive health communication. *Communication Monographs*, 72(2), 144-168.
- Dillard, J. P., Weber, K. M., & Vail, R. G.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ived and actual effectiveness of persuasive messages: A meta-analysis with implications for formative campaign research. *Journal of Communication*, 57, 613 - 631.
- Ditto, P. H., Scepansky, J. A., Munro, G. D., Apanovitch, A. M., & Lockhart, L. K. (1998). Motivated sensitivity to preference-inconsistent in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1), 53-69.
- Eagly, A. H., & Chaiken, S. (1993). *The psychology of attitudes*. Fort Worth, TX: Harcourt

Brace Jovanovich.

- Fazio, R. H., & Olson, M. A. (2003). Implicit measures in social cognition research: Their meaning and us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4(1), 297-327.
- Fetzer, J. H. (2004). Disinformation: The use of false information. *Minds and Machines*, 14(2), 231-240.
- Fiske, S. T., & Taylor, S. E. (1991). *Social cognition*. New York, NY: McGraw-Hill Book Company.
- Flynn, D. J., Nyhan, B., & Reifler, J. (2017). The nature and origins of misperceptions: Understanding false and unsupported beliefs about politics. *Political Psychology*, 38(S1), 127-150.
- Fridkin, K., Kenney, P. J., & Wintersieck, A. (2015). Liar, liar, pants on fire: How fact-checking influences citizens' reactions to negative advertising. *Political Communication*, 32(1), 127-151.
- Garrett, R. K., & Weeks, B. E. (2013, February). The promise and peril of real-time corrections to political misperceptions. In *Proceedings of the 2013 conference on Computer supported cooperative work* (pp. 1047-1058). ACM.
- Gervais, W. M., & Norenzayan, A. (2012). Analytic thinking promotes religious disbelief. *Science*, 336(6080), 493-496.
- Gibbons, P., Busch, J., & Bradac, J. J. (1991). Powerful versus powerless language: Consequences for persuasion, impression formation, and cognitive response. *Journal of Language and Social Psychology*, 10, 115 - 133.
- Giner-Sorolla, R., & Chaiken, S. (1994). The causes of hostile media judgment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0(2), 165-180.
- Gottfried, J. A., Hardy, B. W., Winneg, K. M., & Jamieson, K. H. (2013). Did fact checking matter in the 2012 presidential campaign?.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57(11), 1558-1567.
- Green, M. C., Garst, J., Brock, T. C., & Chung, S. (2006). Fact versus fiction labeling: Persuasion parity despite heightened scrutiny of fact. *Media Psychology*, 8, 267 - 285.
- Hafer, C. L., Reynolds, K. L., & Obertynski, M. A. (1996). Message comprehensibility and persuasion: Effects of complex language in counterattitudinal appeals to laypeople.

Social Cognition, 14, 317 - 337.

- Haslam, S. A., & Turner, J. C. (1995). Context dependent variation in social stereotyping 3: Extremism as a self categorical basis for polarized judgement.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5(3), 341-371.
- Hart, W., Albarracin, D., Eagly, A. H., Brechan, I., Lindberg, M. & Merrill, L. (2009) Feeling validated versus being correct: A meta-analysis of selective exposure to inform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35(4), 555-588.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NY: Guilford Press.
- Hochschild, J. L., & Einstein, K. L. (2015). Do facts matter? Information and misinformation in American politics.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30(4), 585-624.
- Hullett, C., & Boster, F. (2001). Matching messages to the values underlying value-expressive and social-adjustive attitudes: Reconciling an old theory with a contemporary measurement approach. *Communication Monographs*, 68(2), 133-153.
- Jain, S. P., & Maheswaran, D. (2000). Motivated reasoning: A depth-of-processing perspectiv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6(4), 358-371.
- Jamieson, K. H. (2012). Cable news networks increase amount and public accessibility of incivility. *FlackCheck.org*.
- Jarman, J. W. (2016). Influence of political affiliation and criticism on the effectiveness of political fact-checking. *Communication Research Reports*, 33(1), 9-15.
- Kahan, D. M. (2013). Ideology, motivated reasoning, and cognitive reflection.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8(4), 407-424.
- Kahan, D. M., Peters, E., Wittlin, M., Slovic, P., Ouellette, L. L., Braman, D., & Mandel, G. (2012). The polarizing impact of science literacy and numeracy on perceived climate change risks. *Nature Climate Change*, 2(10), 732-735.
- Kuklinski, J. H., Quirk, P. J., Jerit, J., Schwieder, D., & Rich, R. F. (2000). Misinformation and the currency of democratic citizenship. *The Journal of Politics*, 62(3), 790-816.
- Kunda, Z. (1990). The case for motivated reasoning. *Psychological Bulletin*, 108(3), 480-498.

- Lee, H., & Oh, H. J. (2017). Normative mechanism of rumor dissemination on twitter.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20(3), 164-171.
- Levendusky, M. S. (2013). Why do partisan media polarize viewer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7(3), 611-623.
- Lord, C. G., Ross, L., & Lepper, M. R. (1979). Biased assimilation and attitude polarization: The effects of prior theories on subsequently considered evid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11), 2098-2109.
- Lowrey, T. M. (1998). The effects of syntactic complexity on advertising persuasiveness.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7, 187 - 206.
- Maheswaran, D., & Chaiken, S. (1991). Promoting systematic processing in low-motivation settings: Effect of incongruent information on processing and judg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1), 13-25.
- Maheswaran, D., Mackie, D. M., & Chaiken, S. (1992). Brand name as a heuristic cue: The effects of task importance and expectancy confirmation on consumer judgments.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1(4), 317-336.
- Martin, R., Hewstone, M., & Martin, P. Y. (2007). Systematic and heuristic processing of majority and minority-endorsed messages: The effects of varying outcome relevance and levels of orientation on attitude and message process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3(1), 43-56.
- Martin, B. A. S., Lang, B., & Wong, S. (2003). Conclusion explicitness in advertising: The moderating role of need for cognition (NFC) and argument quality (AQ) on persuasion. *Journal of Advertising*, 32, 557 - 565.
- Mitchell, A., & Holcomb, J. (2016). State of the news media 2016. Pew Research Center. Retrieved from <http://www.journalism.org/2016/06/15/state-of-the-news-media-2016/>
- Matthes, J., & Valenzuela, S. (2012, May). Who learns from cross-cutting exposure? Motivated reasoning, counterattitudinal news coverage, and awareness of oppositional views. In *Manuscript presented at the annual conference of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Phoenix, AZ.
- Nyhan, B., & Reifler, J. (2010). When corrections fail: The persistence of political misperceptions. *Political Behavior*, 32(2), 303-330.

- Nyhan, B., & Reifler, J. (2015). The effect of fact checking on elites: A field experiment on US state legislator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9(3), 628-640.
- O'Sullivan, P. B., & Geiger, S. (1995). Does the watchdog bite? Newspaper ad watch articles and political attack ads.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2(4), 771-785.
- Pariser, E. (2011). *The filter bubble: What the Internet is hiding from you*. New York, NY: Penguin Books.
- Park, H. S., Levine, T. R., Westerman, C. Y. K., Orfgen, T., & Foregger, S. (2007). The effects of argument quality and involvement type on attitude formation and attitude change: A test of dual-process and social judgment predictions.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33, 81-102.
- Pennycook, G., Cheyne, J. A., Barr, N., Koehler, D. J., & Fugelsang, J. A. (2014). The role of analytic thinking in moral judgements and values. *Thinking & Reasoning*, 20(2), 188-214.
- Pennycook, G., & Rand, D. G. (2017, September 12). Who falls for fake news? The roles of analytic thinking, motivated reasoning, political ideology, and bullshit receptivity. Retrieved from 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3023545
- Perloff, R. M. (1989). Ego-involvement and the third person effect of televised news coverage. *Communication Research*, 16, 236-262.
- Petty, R. E., & Cacioppo, J. T. (1986). The elaboration likelihood model of persuasion.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9, 123-205.
- Petty, R. E., Cacioppo, J. T., & Goldman, R. (1981). Personal involvement as a determinant of argument-based persua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5), 847-855.
- Petty, R. E., Cacioppo, J. T., & Schumann, D. (1983). Central and peripheral routes to advertising effectiveness: The moderating role of involvement.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0(2), 135-146.
- Polkinghorne, D. (1983). *Methodology for the human sciences: Systems of inquiry*. Albany, NY: SUNY Press.
- Reid, S. A. (2012). A self-categorization explanation for the hostile media effect. *Journal of*

- Communication*, 62(3), 381-399.
- Schultz, F., Utz, S., & Göritz, A. (2011). Is the medium the message? Perceptions of and reactions to crisis communication via twitter, blogs and traditional media. *Public Relations Review*, 37(1), 20-27.
- Southwell, B. G., & Thorson, E. A. (2015). The prevalence, consequence, and remedy of misinformation in mass media systems. *Journal of Communication*, 65(4), 589-595.
- Swami, V., Voracek, M., Stieger, S., Tran, U. S., & Furnham, A. (2014). Analytic thinking reduces belief in conspiracy theories. *Cognition*, 133(3), 572-585.
- Taber, C. S., Cann, D., & Kucsova, S. (2009). The motivated processing of political arguments. *Political Behavior*, 31(2), 137-155.
- Taber, C. S., & Lodge, M. (2006). Motivated skepticism in the evaluation of political belief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0(3), 755-769.
- Tan, A. S., Lee, Ch. J., & Chae, J. (2015). Exposure to health (mis) information: Lagged effects on young adults' health behaviors and potential pathways. *Journal of Communication*, 65(4), 674-698.
- Thorson, E. (2016). Belief echoes: The persistent effects of corrected misinformation. *Political Communication*, 33(3), 460-480.
- Turner, J. C., Hogg, M. A., Oakes, P. J., Reicher, S. D., & Wetherell, M. S. (1987). *Rediscovering the social group: A self-categorization theory*. Cambridge, MA: Basil Blackwell.
- Vallone, R. P., Ross, L., & Lepper, M. R. (1985). The hostile media phenomenon: biased perception and perceptions of media bias in coverage of the Beirut massac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3), 577-585.
- van Strien, J. L., Kammerer, Y., Brand-Gruwel, S., & Boshuizen, H. P. (2016). How attitude strength biases information processing and evaluation on the web. *Computers in Human Behavior*, 60, 245-252.
- Weeks, B. E., & Garrett, R. K. (2014). Electoral consequences of political rumors: Motivated reasoning, candidate rumors, and vote choice during the 2008 US presidential ele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26(4), 401-422.

Wojcieszak, M. E., & Mutz, D. C. (2009). Online groups and political discourse: Do online discussion spaces facilitate exposure to political disagreement? *Journal of Communication*, 59(1), 40-56.

최초 투고일 2018년 2월 6일

게재 확정일 2018년 3월 9일

논문 수정일 2018년 4월 1일

〈부록 I: 가짜뉴스 메시지〉

	실현물 내용	사실 여부
차 별 금 지 법	<p>차별금지법 사실상 동성애 허용법 - 통과시 문란한 사회 조장·보수단체 반대 시위 예고</p> <p>진보 정당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해 비난 여론이 거세다.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2일 법를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차별금지법 발의안을 이번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 밝혔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나이, 언어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 하지만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 사유에는 성 정체성이 포함되어 있어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는 사실상 '동성애 허용법'이다.</p>	<p>거의 사실: 차별금지법의 취지가 동성애를 허용하기 위한 법은 아니지만 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사유에 성 정체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해석상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p>
	<p>보수인사들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동성결혼과 동성부부의 자녀 입양 허용은 물론 초·중·고 교육기관 성교육 시간에 동성 간 성행위 관련 교육이 의무화 되어 동성애를 장려하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성애 반대 입장을 표현하는 것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어 기형 부모가 자식에게 동성애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도 2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p>	<p>거짓: 동성 결혼 합법화를 비롯한 동성애 관련 법률은 차별금지법과는 별개의 논의이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에 대한 제도적 합법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법안을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는 것.</p>
	<p>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문란한 성생활과 에이즈 발병 증가가 예상된다. 질병관리본부는 남성 에이즈 환자 발병 원인의 대부분이 동성 간 성관계에 의한 것이라며 동성애와 에이즈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고한 바 있다. 동성애 처벌법을 시행중인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에이즈 발병률이 크게 감소한 데 반해 차별금지법을 시행 중인 유럽연합에서는 에이즈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p>	<p>거짓: 동성애가 에이즈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한 과학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음.</p>
	<p>에이즈 치료비를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에이즈 환자의 증가는 국가 재정 위기와도 연결되는 심각한 문제다.</p>	<p>거의 사실: 에이즈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사실임.</p>
	<p>한편 다수의 보수단체들은 논평을 통해 법 제정을 격렬히 비난하며 대규모 반대 시위를 계획 중이라 밝혔다.</p>	<p>해당 없음</p>
테 러 방 지 법	<p>테러방지법 개정안 사실상 민간인 사찰법 - 통과시 인권 침해 우려·진보단체 반대 시위 예고</p> <p>보수 정당에서 테러방지법 강화를 추진해 비난 여론이 거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2일 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테러방지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 밝혔다. 테러방지법은 테러위협인물의 위험 행동에 대한 감시를 허용하여 테러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 하지만 감시를 허용하는 테러위협인물의 기준이 명확치 않아 다양한 사회인사들의 사생활이나 비밀 수집이 가능한 사실상 '민간인 사찰법'이다.</p>	<p>거의 사실: 테러방지법은 테러의 예방과 대응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으로 정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지만 테러단체 구성원으로 의심되는 국민에 대한 동향 파악을 하기하기 때문에 민간인 사찰법이라는 해석도 가능함.</p>
	<p>진보인사들은 테러방지법이 개정될 경우 일반인에 대한 영장 없는 개인정보 수집과 통화 도감청 등이 가능해지고 인터넷이나 방송·신문, 게시판을 실시간 감시 관리하는 등 전국민을 사찰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개정안에는 정보수집의 주체를 정부 뿐만 아니라 국회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여소야대 정국에서 보수 정당의 정적(政敵) 사찰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p>	<p>거짓: 법적으로 명시된 테러위협인물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으로 대다수의 일반 국민과는 관계가 없음.</p>
	<p>테러방지법이 개정되면 무차별적 사찰과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예상된다. 테러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집회·시위가 광의의 테러 범주에 포함되어 집회 대표나 참가자를 임의 조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긴급 체포나 감금이 합법화된다. 영국, 프랑스, 미국 등 테러방지법을 시행 중인 국가에서는 이미 일반인 사찰이 만연하며 개인의 사이버 행위에 대한 감시가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p>	<p>거짓: 테러위협인물이라 할지라도 영장 없는 정보수집과 통화 도감청은 불가능. 통신비밀보호법 규정에 따라 내국인은 100% 고등법원 수석 부장판사의 영장을 받고, 외국인은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함.</p>
	<p>미국의 경우 도감청이 불가능 텔레그램 등으로의 '사이버 망명'이 이루어질 정도로 사생활 침해에 대한 공포가 매우 높다.</p>	<p>거의 사실: 텔레그램의 이용이 증가한 것은 사실임.</p>
	<p>한편 다수의 진보단체들은 논평을 통해 법 개정을 격렬히 비난하며 대규모 반대 시위를 계획 중이라 밝혔다.</p>	<p>해당 없음</p>

〈부록 II: 팩트체크 메시지〉

	차별금지법	테러방지법
강한 주장	<p>JTBC(TV조선) 팩트체크 결과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허용법이라는 주장은 '거의 거짓임'이 판명되었습니다.</p> <p>차별금지법은 개인이 지니고 태어난 특성 때문에 차별이나 혐오 등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으로 동성 결혼 등 제도적 합법화와는 관계가 없습니다.</p> <p>또한 동성애가 에이즈 발병의 원인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동성애와 에이즈와의 상관관계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에이즈 발병 원인의 1위가 감염인과의 성관계이긴 하지만 동성 간의 관계에 한정된 것은 아니며 안전하지 않은 모든 성접촉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에이즈 발병률이 가장 높은 아프리카의 경우 이성과의 성관계로 인한 감염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p>	<p>JTBC(TV조선) 팩트체크 결과 테러방지법이 민간인 사찰법이라는 주장은 '거의 거짓임'이 판명되었습니다.</p> <p>테러방지법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테러 위험인물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으로 대다수의 일반 국민과는 관계가 없습니다.</p> <p>또한 테러방지법이 개정될 경우 영장 없는 개인정보 수집과 통화 도감청 등이 가능해진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테러방지법 부칙 2조2항에 대테러 활동이 필요한 경우 통신감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통신감청은 영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규정에 따라 내국인은 100% 고등법원 수석 부장판사의 영장을 받고, 외국인은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p>
약한 주장	<p>JTBC(TV조선) 팩트체크 결과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허용법이라는 주장은 '거의 거짓임'이 판명되었습니다.</p>	<p>JTBC(TV조선) 팩트체크 결과 테러방지법이 민간인 사찰법이라는 주장은 '거의 거짓임'이 판명되었습니다.</p>

〈부록 III: 가짜뉴스 실험물 예시〉

제일뉴스

뉴스스포츠·연예주말엔오피니언포토·동영상사람들

속보오늘이슈정치경제사회국제문화LIFEIT/과학

차별 금지법 사실상 동성애 허용법

통과시 문란한 사회 조장...보수단체 반대 시위 예고

기사입력 2017-10-16 11:20

트위터 페이스북 0

진보 정당에서 차별 금지법 제정을 추진해 비난 여론이 거세다.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15일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차별 금지법 발의안을 이번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 밝혔다. 차별 금지법은 성별, 장애, 나이, 언어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 하지만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 사유에는 성 정체성이 포함되어 있어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는 사실상 '동성애 허용법'이다.

보수인 사들은 차별 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동성결혼과 동성부부의 자녀 입양 허용은 물론 초중고 교육기관 성교육 시간에 동성 간 성행위 관련 교육이 의무화 되어 동성애를 장려하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성애 반대 입장을 표현하는 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가정 부모가 자식에게 동성애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도 2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차별 금지법이 제정되면 문란한 성생활과 에이즈 발병 증가가 예상된다. 질병관리본부는 남성 에이즈 환자 발생 원인의 대부분이 동성 간 성관계에 의한 것이라며 동성애와 에이즈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고한 바 있다. 동성애 처벌법을 시행 중인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에이즈 발병률이 크게 감소한 데 반해 차별 금지법을 시행 중인 유럽연합에서는 에이즈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에이즈 치료비를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에이즈 환자의 증가는 국가 재정 위기와의 연결되는 심각한 문제다.

한편 다수의 보수단체들은 논평을 통해 법 제정을 격렬히 비난하며 대규모 반대 시위를 계획 중이라 밝혔다.

박태우 기자 twpark@cheil.co.kr

〈부록 IV: 팩트체크 실험물 예시〉

JTBC 팩트체크 결과 차별 금지법이 동성애 허용법이라는 주장은 '거의 거짓'임이 판명되었습니다.



JTBC 약한 주장

JTBC 팩트체크 결과 차별 금지법이 동성애 허용법이라는 주장은 '거의 거짓'임이 판명되었습니다. 차별 금지법은 개인이 지니고 태어난 특성 때문에 차별이나 혐오 등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으로 동성 결혼 등 제도적 합법화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동성애가 에이즈 발병의 원인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동성애와 에이즈와의 상관관계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에이즈 발병 원인의 1위가 감염인과의 성관계이긴 하지만 동성 간의 관계에 한정된 것은 아니며 안전하지 않은 모든 성접촉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에이즈 발병률이 가장 높은 아프리카의 경우 이성과의 성관계로 인한 감염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JTBC 강한 주장

Abstract

Research on fake news perception and fact-checking effect

Role of prior-belief consistency

Yum, Jung-Yoon

Research Professor, Korea University

Jeong, Se-Hoon

Associate Professor, Korea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perceptions about fake news and the effects of fact-checking journalism. We particularly focused on biased information processing as a result of prior beliefs. Results showed that news messages that are inconsistent with prior beliefs were more likely to be perceived as fake news, and were less likely to be shared with others. For fact-checking information, we tested the effects of argument quality (strong vs. weak) and source type (favorable vs. unfavorable). There was a three-way interaction among argument quality, source type, and prior belief. Specifically, for belief-consistent fake news, fact-checking information that contained strong arguments was evaluated positively, whereas for belief-inconsistent fake news, fact-checking information from a favorable source that contained strong arguments was evaluated positively. Evaluation toward fact-checking information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rgument quality and fake news attitudes.

Keywords: fake news, fact check, biased information processing, argument quality, source